

山本有造의 『「滿洲國」經濟史研究』 서평 (名古屋大學出版會, 2003년, 316면)

정 안 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

중국 동북지역에 존재했던 괴뢰국가 '滿洲國'은 1932년부터 45년에 이르는 약 14년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만주국의 붕괴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그 존속기간의 약 4배를 넘어서는 약 60여년의 悠長한 歲月이 흘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만주국과 관련한 '민족주의VS탈민족주의' 논의가 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과연, 20세기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 만주국은 어떻게 존재했으며, 그 역사적의 함의는 무엇인가. 그 동안 일본학계는 1970년대 만주연구가 개시된 이래 다양한 시각과 문제관심으로부터 막대한 연구축적을 거듭해 왔다. 특히, 본 서평에서 문제로 하는 야마모토 유조(山本有造)의 『滿洲國』經濟史研究(名古屋大學出版會, 2003년)는 일본학계의 제4세대 만주연구를 대표하는 획기적인 저작이다. 이미 저자는 1992년 조선과 대만의 국제수지를 분석한 『日本植民地經濟史研究』(名古屋大學出版會)라는 역작으로 출판과 동시에 일본 식민지 연구사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고, 국내학계에도 널리 소개된 바 있다. 더구나, 1930년대 이후 '만주국'을 증점적으로 분석한 본서는 앞서 『日本植民地經濟史研究』의 속편으로, 일본학계에서는 발행과 동시에 연구서로서는 드물게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또한, 본서는 현재 저자가 진행 중에 있는 식민지 경제사 연구의 완결판 『大東亞共榮圈』經濟史研究 총 3부작을 고려하면,

그 가운데 제2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약력은 京都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부터 동대학 人文科學研究所에 재직한 이래 일본학계의 식민지 경제사 연구를 주도해 온 자타가 공인하는 중진연구자다. 본서는 아래와 같이, 그 동안 저자가 장기간에 걸쳐 발표한 주요 논문과 최근 집필 논문을 추가한 전체 제4부 제8장 구성으로 근래에 보기 드문 대작이다. 특히, 그 전체적인 요지는 논쟁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치밀한 실증 그리고 독자적인 논리로 만주국 경제 14년사의 포퍼먼스를 수량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제I부 「滿洲國」概論

제1장 「滿洲國」論 -일본식민지 제국과 「만주」

제2장 「滿洲國」經濟論 -계획과 통제-

제II부 「滿洲國」經濟의 매크로 분석

제3장 「滿洲國」生産力の 수준과 구조 -생산지수 및 생산실적의 검토-

제4장 「滿洲國」對外 經濟關係의 전개 -국제수지분석을 중심으로-

제III부 「滿洲」周邊交易論

제5장 「關東州」貿易統計論

제6장 「朝鮮」·「滿洲」간의 陸境貿易論

제IV부 統計資料解題

제7장 「滿洲國」國民所得統計에 대해서

제8장 「滿洲國」國際收支統計에 대해서

본서는 ‘만주국’ 14년간의 경제사를 그 동안 저자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수량경제사(이른바 쿠즈네츠형 국민소득계산)의 연구방법²⁾과 저자 스스로가 장기간에 걸쳐 발굴한 획기적인 자료³⁾로부터 적출한 매크로 데이터를 구사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사실 종래 만주국 혹은 만주경제사 연구는 제국주의 정책사 연구가 주류였던 관계로 생산, 시장, 정책 등 종합적이고도 수량적인 연구는 거의 공백상태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바꾸어 말하면, 본 연구가 ‘만주국’기 중국 동북경제에 대한 매크로 경제학의 이론 틀에 입각한 최초의 연구라는 것이다. 본서는 그 수량적, 실증적 지표로서 國民所得, 生産指數, 國際收支를 통해 만주경제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I부 제1장 「滿洲國」論에서는 ‘일본 식민지 제국 50년의 역사에서 만주의 역할과 그 의의를 해설하고 있다. 그 주요 목적은 ‘만주국’이 존재했던 14년간에 걸친 중국 동북경제의 변화를 일본제국의 팽창과 관련시켜, 그 특질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주국’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혁명 단계로부터 구체적인 조직단계에 이르러서는 노동, 물자, 자금 등 모든 면에 걸쳐 일본 국내와의 協力同心이 불가결했고, ‘만주국’의 독자성 혹은 독립성은 그 내실과 형식에서도 급속히 변질’ 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일본인 권리의 확대, 일본과 행정의 일체화, 학제교육의 일본화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이 같은 결론은 일본제국의 급속한 비대화를 촉진시킨 경제적 배경을 ‘만주국’ 차원에서 최초로 검증한 것으로, 종래 ‘大東亞共榮圈論’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사 정리와 자료의 보강으로 그 편성 원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한 것이다.

제2장 「滿洲國」經濟論에서는 ‘滿洲國의 統制經濟’이념에 주목하여, 그 형성과 변천의 개요를

정리하고 있다. ‘만주국’경제의 전개 과정은 14년간 對日從屬과 對日寄與가 일관되게 강제되었다. 즉, 대일종속의 심화 과정은 건국과 관련한 제 사업을 지지하는 자금과 자재를 일본에 의존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일본 측의 ‘만주’에 대한 공급력 고갈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 때문에 자본과 물자 양면에서 대일수입이 급격히 증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만주국의 통제경제는 최종적으로 파탄했다는 것이다. 이는 만주국 건국 초기부터 중일전쟁기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걸쳐 전개된 경제통제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만주국’의 전시경제는 ‘생산계획보다도 물자통제’를 중시하는 경제운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제II부 ‘滿洲國’經濟의 매크로 분석은 1930년-1940년대에 걸친 만주국의 농업과 공업을 중심으로 생산력 수준과 국민소득 그리고 무역, 투자, 환율 등 국제수지를 시작으로 만주국 경제의 거시적인 분석을 시도한 본서의 白眉라 할 수 있겠다. 제3장 ‘滿洲國’의 생산력 수준과 구조는 생산지수 및 생산실적에 근거해서 생산력 수준의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고 있다. 1936년부터 44년에 걸친 생산지수에 대해서는 1936년-38년의 평균치를, 생산액에 대해서는 1931년, 37년, 43년의 생산액을,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1937년, 39년, 41년, 43년의 소득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 자료는 저자가 장기간에 걸쳐 발굴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정리·조합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소비재 생산지수(1941년 정점)와 자본재 생산지수(1943년이 정점) 그리고 개별 생산지수가 보여주는 동향의 차이는 종래 연구와 관련해서, ‘만주국’ 경제의 군사화를 수량적으로 검증한 중요한 자료적인 백업이라 할 수 있겠다.

제4장 ‘滿洲國’對外經濟 關係의 전개는 일본

2) 본서의 연구방법과 자료 및 그 경위에 대해서는 山本有造, 「만주국 14년사에 대한 수량경제사적 접근-근저 ‘만주국’ 경제사 연구를 중심으로-」 만주학회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4년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역사와 기억 속의 만주」 2004년 12월을 참고.

3) 저자의 ‘만주국’ 연구와 관련한 자료수집의 경위와 자료 해설에 대해서는 アジア經濟研究所, 「「張公權文庫」目錄」 1995년판과 山本有造, 「石田興平博士と石田文庫」 「經濟史研究」 제7호, 2003년.

이 ‘만주국’기에 추진한 만주경제의 개조가 당시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의 코스트를 발생시켰는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1920년대 만주경제는 중국관내(對華北 노동력의 의존, 對華中 대두수출과 생활필수품의 수입), 세계경제(대두수출), 일본경제(대두수출과 자본수입)의 크게 3방면으로 개방되어, ‘외국자본과 화북 노동력에 의존하는 대두 모노컬처를 구축하여, 그 수출력으로 대외균형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에 의해 그 개방성은 붕괴되고, ‘만주국’의 무역과 무역외 거래는 폐쇄적인 일본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일본세력권은 일본군의 공세에 의해 지리적으로 확대되면서 앞서 단절된 화북 혹은 화중과의 교역이 다시 재개되었다.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대만주 투자, 대만주 건설자금의 수출, 대만주 소비재 수출은 1930년대 전반에 급증하였으나, 이후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두에 걸쳐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대일 경제관계는 급격한 변모를 거듭했다. 이 같은 만주국의 복잡한 대외관계의 전개 과정은 국제수지의 통계수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되고 있다.

제Ⅲ부 「滿洲」周邊交易論에서는 ‘관동주 및 조선과 교역관계의 특질’을 논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5장 「關東州」貿易統計論은 관동주 무역통계를 구사해서, 당시 동만주 무역 실태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관동주의 대만주국 무역과 冀東密貿易에 대한 해설에서는 관동주 무역통계와 일본, 조선, 대만 무역통계 수치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만주에 대한 채수출과 대중국 밀무역의 문제로 구분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에 이르러서는 역시 자료상의 신뢰성 등 다양한 문제로 금후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제6장 「朝鮮」·「滿洲」간의 陸境貿易論은 지금까지 실증연구가 크게 뒤쳐져 있던 만주와 조선간의 陸境교역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16세기 의주개시로부터 한일합방에 이르는 육로교역의 변천을 정리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1919-45년에 이르는 육로

교역을 크게 4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육로교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선만주 간 물류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국면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반식민지 성격이 농후하게 반영”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Ⅳ부 統計資料解題의 제7장(「滿洲國」國民所得統計에 대해서)은 만주국의 국민소득 추계와 국제수지 통계에 대한 정리, 추계작업에 대한 경위와 그 이용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즉,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만철조사회, 만주국 경제부, 만주조사기관 연합회의 3개 기관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추계자료를 해체하고 있다. 또한, 제8장(「滿洲國」國際收支統計에 대해서)은 만주국 재무부가 만철조사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력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작성한 국제수지에 관한 공식통계 그리고 만주중앙은행이 작성한 대일 혹은 대화북 국제수지에 관한 추계자료를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제7장과 제8장은 제5장과 함께 자료 활용을 위한 뛰어난 매뉴얼이자,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유익한 연구자산이라 할 수 있겠다.

평자의 입장에서 본서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역시 ‘만주국’ 경제의 내재적 특질로서 ‘비완결성’이라 할 수 있겠다. 저자는 1920년대 중국관내와 세계경제에 개방되었던 만주경제가 폐쇄적인 ‘엔블릭’으로 편입되어, 축소재생산 구조로 변모해 가는 계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비완결성’을 내재적 특질로 했던 만주경제가 대일종속과 대일기여를 전제로 한 ‘엔블릭’ 경제권에 편입됨으로서 제국의 영토를 확대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일본경제의 파멸과 함께 제국경제를 파탄시키는 불가역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만주경제가 내재한 비완결성이 만주국 건국이념의 기만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변질시키는 역사적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논지이다. 즉, 생산력 수준을 넘어서는 일본제국의 과잉한 대외팽창과 만주국 경제건설이 畫中之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역

사적 불가역성을 만주경제의 내재적 특질이라 할 수 있는 ‘비완결성’으로 해명하고 있다.

한편, 당시 만주국의 소비재 산업을 대표하는 섬유방직업을 연구하는 평자의 입장에서 본서의 분석과 관련한 蛇足的인 再解釋은 다음과 같다.⁴⁾ 저자는 제3장 만주국의 생산력 분석에서 섬유방직업의 생산력 수준이 1943년(본서 80-81면, 「표 3-1」의 만주국 산업생산 지수)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생산력 지수의 동향은 바꾸어 말하면, 마치 만주방직업이 1943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시기 만주방직업은 1937년 9월 中日戰爭 발발과 함께 종래 면사포 수급의 대외의존에 따른 戰時衝擊으로 1930년대 전반기 면직중심의 소극적인 면업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독자적인 하급면직물 중심의 적극적인 면직물자급화 혹은 移入代替化를 전개하였다. 즉, 만주국 산업부는 적극적인 일본면업자본의 유치정책과 활발한 원면증산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종래의 면업에 관련한 전시통제를 自治統制로부터 국가주도의 法的統制로 전환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주방직업은 전시기 만주 특유의 시장조건과 산업통제를 배경으로 백화쟁란을 방불케 하는 비약적인 성장과 전시 고축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9년 이후 만주방직업은 중일전쟁 이래 만주정부의 무분별한 자본유치정책에 의한 과당경쟁과 파행적인 원면증산정책으로 극단적인 원면부족사태에 직면하여, 설비규모의 70-80%에 육박하는 고율의 작업단축이 불가피하였다. 결국, 설비와 원면의 심각한 괴리에 의한 만주방직업의 급격한 위축과 재편은 1938년 후반 이후 만주정부가 추진한 일본국 내로부터 대대적인 유희면방설비의 대만주 ‘地域別分散移住計劃’을 유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1940년대 만주방직업은 심각한 원면부족 사태를 커버하고자, 원면과 스프 그

리고 대마와의 混紡混織에 의한 생산력 구조의 급격한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이 같은 실태는 1939년경을 전후로 한 만주방직업의 생산력 수준과 이를 지지하는 생산력 구조가 크게 괴리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바꾸어 말하면, 만주국의 소비재 산업을 대표했던 만주방직업의 이 같은 실태는 금후 만주국의 경제사 연구가 개별 기업사 혹은 산업사 연구에 기초한 경제구조의 다이내믹스와 그 구체성 확보가 금후의 과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무튼, 본서의 연구사적 공헌은 무엇보다도 역시 만주국 경제 14년간의 퍼포먼스를 수량적, 실증적으로 그 전체상을 구명했다는 것이다. 즉, 일본제국이 국민국가로부터 공세적인 대륙국가로 변질되는 대외팽창 과정에서 만주국 경제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대외 경제관계와 주변부 교역도 포함시켜, 농업으로부터 광공업에 이르는 만주국의 생산력 발전을 매크로 데이터를 구사해서 수량적으로 밝혔다. 특히, 본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만주국의 생산력 수준에 대한 신뢰 가능한 통계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만주국 건설과정에서 그 계획과 실행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종래 제국주의 정책사 연구에 치중해 왔던 만주경제사 연구와 확연히 구분되는 획기적인 논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역사해석과 그 서술에 관련한 저자의 독자적인 자세이다. 저자는 과제와 영역 설정에서 신중한 입장과 함께 그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자신감에 넘치는 각질의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이는 물론 안이한 추측 혹은 수사 어구를 적극 배제하고 검증된 사실에만 근거해서, 역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역사연구에 대한 저자 나름의 울골은 자세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자의 이런 역사해석에 대한 금욕적인 평가와 독특한 문체가 학술서로서 본서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 아

4) 정안기, 「전성·전시 滿洲紡績業의 성장과 産業統制의 특질 -식민지 조선방직업과 비교경제사의 시점에서-」 만주학회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4년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역사와 기억 속의 만주』 2004년 12월을 참고.

무튼 본서는 그 동안 저자 연구역정의 결정체로서 만주국 경제사 연구 혹은 식민지 경제사 연구

의 고전이자,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른바 山本史學의 정수로 새롭게 자리매김 될 것이다.